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주권자 국민도 행사해야”

국민 300명·사업자 30곳 이상
무분별 고발 방지 일정 기준 설정
경제형별 합리화도 병행 추진

남용 우려... 중대사건 한정 제한
지방정부에 고발권 부여 검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

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별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답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

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 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전, 제주 신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검토

제주지역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 해제
최근 수급관리 역량 개선으로 재개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 기여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 해제’에 따라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통연계 검토를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 문제로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의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제주시 월정리 앞바다에 위치한 해상 풍력발전기의 모습. /뉴시스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과거 강제적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자발적 출력 감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강제 출력제어 없이도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계

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는 전력시장 제도 혁신과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전력계통 안정화의 대표적 성과”라며 “발전사업 허가 재개를 통해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실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사계절 내내 이동노동자 안전 강화”

노사발전재단 ‘안전이음 프로젝트’
계절별 위험요인 반영 교육 등 진행

노사발전재단은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2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전 지원을 이어간다.

재단은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절별 주요 추진 내용은 ▲봄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 ‘땀 뻘뻘, 안전엔 느낌표’ ▲가을 ‘Fall in 안전, 가을 안전에 빠지다’ ▲겨울 ‘온(溫)세상 안전’ 등이다.

첫 번째 ‘봄’ 프로젝트는 이날 김포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김포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쿠팡이츠 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

업해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지킴이’ 결성대회가 열린다.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싱크홀 등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음주운전 등 위험행위를 제보하는 도로위 안전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사계절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새만금서 ‘조사료 종자’ 생산

106ha 규모 종자생산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건초·짚 등)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 제고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국내 조사료 종자 수입 의존율은 87.7%에 달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종자생산단지는 총 106헥타르(ha) 규모로, 축구장 약 15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생산단지는 약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나뉘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생산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된다.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대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이후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2개 법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6월부터 영농을 시작할 수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새만금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농생명산업의 중요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후부, 전기차 충전보조금 부당집행 적발

3주간 총 100여건 신고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 적발에 나섰다.

기후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3주간 운영한 결과 총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3월 6~27일 기간 접수된 신고 기준이다. 중복 신고는 제외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철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뉴시스